

기자회견문

대선불복불법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

배포일 : 2025.8.21.(목)

□ 국민소통국 : ☎ 02-2630-0050 □ 담당 : 최서연 과장

대선불복 불법현수막,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불복 불법현수막에 대응하기 위해 8월 18일(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불복불법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특별위원장에는 김현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동아 의원, 위원은 국토위 소속 전용기 의원, 행안위 소속 채현일 의원, 홍보위원장 한웅현 위원장, 법률자문을 위해 강원모 변호사, 이지수 변호사로 구성되었습니다. 향후 입법·제도 개선을 위해 행안위 소속 의원과 현수막 문제가 심각한 영남권 인사들을 추가 선임하여 전국적 대응을 전개할 것입니다.

최근 ‘내일로미래로당’을 중심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부정하는 허위조작정보 현수막이 전국에 걸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얼굴을 합성한 이미지와 함께, “부정선거 주범을 수배합니다”, “중국공산당과 선관위가 만들어준 가짜대통령”이라는 허위 문구를 게재한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입니다.

해당 현수막을 비롯하여 전국에 현수막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내일로미래로당’에 관련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선을 이틀 앞둔 시점에 전국 고3 유권자를 타겟으로 ‘카톡 인스타 검열’이라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배후의 시민단체는 보건학문&인권연구소 김문희 대표입니다.

당시 김문희 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자유민주당 이름으로 현수막 작업을 한다’고 공지하고 보건학문&인권단체 단체의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했으며 현수막에는 ‘내일로미래로당’이라고 직접 펜으로 써서 게시 하였습니다.

해당 현수막에 대한 다수의 신고를 접수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14일 ‘보건학문&인권연구소’ 김문희 대표의 강남구 소재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였고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정식 소환 예정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문희 대표가 운영 중인 ‘보건학문&인권연구소’는 2022년 8월경 백신, 마스크, PCR 반대를 주장하며 설립하였고 보건, 생활건강을 내세우며 교육분야의 좌파교육, 혁신교육, 성평등교육 반대, 태극기 집회 참석, 부정선거 주장, 허위조작정보 전파, 김문수 지지선언 등의 활동을 해오고 극우유튜버와 함께 활동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불법댓글공작팀을 운영해온 리박스쿨과도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 등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교육청과 학교에 폐기를 압박해오며 리박스쿨과도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수차례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이끈 단체들과 활동하거나 성명에 함께 이름을 올려왔고 손효숙 대표 주도로 만들어진 ‘늘봄학교 지지 범시민 교육 연합’에도 참여하였습니다.

더불어 “자유 대한민국 건국정신 바로 세우기 운동을 선포한다”며 열린 ‘이승만 건국대통령 6·3정읍선언 78주년 기념행사’의 참여 단체로 리박스쿨과 보건학문&인권연구소가 나란히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면밀히 대응하여 불법댓글공작부터 불법 현수막까지 끝을 알 수 없는 불법 행위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불복불법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수막 정당에 대한 검증 및 관련 법 개정입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내일로미래로당은 타 사무실 주소를 빌려 선관위에 등록하고, 현수막 게첩만을 주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 대표가 이를 ‘새로운 트렌드’라며 자랑하는 실정입니다. 강력한 법적·정치적 조치가 필요하기에 위원회는 정당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현수막 정당의 폐단을 차단할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한 ‘불법 정치자금’ 건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강화 방안입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재명 대통령 얼굴을 시진핑 주석과 AI로 합성한 허위조작정보 현수막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AI생성형 이미지 관련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했지만 「정당법」 제37조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제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 조항과 현행 공직선거법으로는 제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효성 있고 책임있는 대안을 가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부정선거 허위조작정보 대응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위원회만큼 적극적인 기조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세 번째, 법률 및 제도 개선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와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면담을 통해 선관위의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고 허위선동 표현물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 마련과 함께 철폐 권한 및 실효적 제재 수단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등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령 개정 등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령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선불복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법률 및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8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불복불법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

김현, 김동아, 전용기, 채현일, 한응현, 강원모, 이지수 일동